해외직구 금지 물품, 실태조사 결과, 상담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박상진 소비자보호팀장이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24 해외직구 정보’ 관련 메뉴. 공정위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16일부터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다.이번 소비자24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개편된 소비자24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되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이밖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했다.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사이트 정보는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환경부(초록누리),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 해외직구 관계부처·기관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직구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